

전당대회 코앞인데 룰 미정... 선호투표 놓고 민주당 균열

친명계, 일부 위원 자격 문제 제기
친정청계 “특정 계파에 유리한 룰”
최고위원 사퇴 거론하며 정면 충돌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준비에 가장 기본적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계파 간 유불리에 따른 반발 탓이다.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후보 등록일은 오는 16~17일로, 민주당은 최고위 등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한 쪽의 통 큰 양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당 대표 선출 방식 확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최고위에 당헌·당규 위배 소지가 없다고 보고한 당 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 도입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최고위에선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하는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가 정해 최고위와 당무위의 의결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당규 제66조 문구 중 ‘결선투표’를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로 변경하는 당규 개정안이 올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 최고위원, 이성운 최고위원. /뉴시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호투표는 3인 이상 경선 시 최하위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각각의 후보에게 가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호투표도 결선투표의 일환인데, 결선투표가 투표를 2차례 하는 대신 선호투표는 1번의 투표로 결정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출마한 상황에서 2순위 표가 ‘친명계’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선호투표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까지) 3일 시간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

하자는 것은 어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시키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문정복·이성운·박규환·박지원 최고위원)은 친청(친정청계) 계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최고위에서 표결에 부쳐도 의결이 어렵다.

전준위나 친명(친이재명계)계는 선호투표 역시 당규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친명계는 정청(정청계) 지도부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박규환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명분은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니 평당원 최고위원의 자격

이 없다는 것이고, 박규환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명한 정청(정청계) 전 대표가 물러났으니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명계에선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성운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에선 현 지도부에서 수적 우세를 점한 친청계를 흔들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지도부 정원 9명 중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물러난다면 최고위 전체정수 9명의 과반이 무너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친청계이자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최민희 의원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 입장은, 룰은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데 최고위가 저렇게 갈리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을까”라며 “이 시기 어떤 방식으로 잘 결정하느냐가 또한 최고위의 역량”이라고 했다.

친명계이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박성준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현 상황) 전당대회 자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게 만들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누구의 대리전을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왜 그런 식으로 최고위가 운영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 당이 전대 룰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계파 간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당원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거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차라리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자, 일자리 어떻게 하자’ 이런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이 역동성이 있네’하고 박수라도 칠 텐데 지금 모습은 너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법사위, 野 불참 속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예외 규정 담은 개정안도 발의 예정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 회의에선 법무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1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소위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영장, 기소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홍기원 의원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결정해 주시면 다 (법안심사1소위원회) 직회부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이계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논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1년

늦추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개정안과 검사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보완 방안 중 기소든 불기소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제’를 포함한 몇 건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소법 중에 작년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도 포함하기로 했고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등 중대 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의 후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불응한다거나 시정조치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서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서 징계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

정청래 “다시 강력한 개혁 당대표 되겠다”

당권 재도전 공식화

정청래 전 대표(사진)가 13일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정 전 대표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23대 총선 승리, 22대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재창출이라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 전 대표 사이 갈등)설’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승리의 기복자가 되겠다.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을 이끌며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이끌었고, 당원주권정당의 기반이 되는 ‘1인1표제’를 도입했던 점을 소개했다. 또한 당 대표 시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한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다.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당원들께 죄송했다. 당 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투표로 묻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오늘 영국 앤 공주 접견

한·영 전략적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만난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렌스 경과 한국을 방문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앤 공주는 14일 접견을 통해 한·영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앤 공주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지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앤 공주가 지난 2018년 2월 8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그린피아 호텔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